

6월 10일 금속노조 1만 확대간부가 서울, 청와대로 향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7월부터 시작하는 금속노조 총파업의 전초전이자 전국의 현장간부들이 결의를 모으는 장입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전달하고 사회적 이슈로 널리 알리기 위해 모입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거쳐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 교섭 쟁취 △원청교섭 쟁취를 3대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

기후위기, 산업전환, 디지털화,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은 모두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직결됩니다. 해외공장으로 물량과 일자리가 이동하며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은 경영권과 인사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본은 모든 의사결정을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부 매각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자본의 구조개편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사무직·생산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본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기업별 노조 체계를 뛰어넘어 고용형태와 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적 투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를 자본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노동정책 수립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의 정책수립 전 과정에 반드시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산업·노동정책의 노정(노사정)논의 '틀'부터 만들자는 것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산업위기·양극화, 초기업 교섭으로 대안을!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에 다른 법률과 규율은 불필요합니다. 교섭방식과 교섭의제는 노조와 사용자가 만나 논의하고 충돌하면서 결정지으면 그 뿐입니다. 정부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고, 다양한 교섭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기업 성과분배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업별 교섭은 점점 벌어지는 노동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위기와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문제도 사업장 노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산별노조의 교섭구조는 근로계약 체계 대상이나 자본이 정해놓은 기업 법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걸고 뭉쳐야 교섭력과 투쟁력이 강해진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금속산업 노사가 시작한 중앙교섭, 지역교섭은 초기업 교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더해 자동차·철강 노동자들을 묶는 업종별 교섭, 현대자동차와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재벌그룹사 교섭,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교섭도 가능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초기업 교섭을 자본이 인정하고, 정부가 촉진하고,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 안착될 것을 요구하고 싸웁니다.

겹데기는 가라! 진짜 사장·진짜 교섭 시대로

개정 노조법 2조는 한 개의 기업 법인에 한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갇혀있던 낡은 노사관계의 청산을 알립니다.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양한 형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섭권을 쥔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차에서 일하는 생산, 판매, 경비, 식당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교섭장에 앉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마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교섭이야말로 초기업 교섭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원청 자본은 '진짜 사장'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청사장 뒤에 숨고, 로펌을 앞세워 교섭장이 아닌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갑니다. 그 정점에 현대차그룹 재벌이 있습니다. 원청교섭은 상견례 자체가 격렬하고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하청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본 자들이 이제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결단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은 7월 총파업을 준비합니다. 쟁취

6.10 1만 간부 결의대회 주요 요구

- 1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마련
- 2 복수노조 교섭 청구 단일화 폐지
- 3 자동차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구성
- 4 조선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 5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 참여 보장
- 6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 7 모든 노동자 직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 8 타임오프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
- 9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